

## ‘혐한’ 이후 일본의 배외주의 정동/정치

조경희(성공회대학교)

### 1. 들어가며: 예견된 새로움

2025년 10월 26일, 일본 전국 15개 도시에서 이민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매스미디어에 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시위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SNS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오사카에서는 1,000명 이상이 집결했으며, 동시다발적 이민 반대 시위로서는 최대 규모라는 평가도 나온다. “외국인은 우대받고 있다”, “일본을 회복하자”는 구호는 물론 전혀 새롭지 않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 각지에서는 ‘혐한’ 시위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혐오는 전지구적 현상이 되었지만, 그 표적과 표출 강도는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혐오는 오랫동안 ‘혐한’, 즉 한반도 출신자—특히 재일조선인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 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긴급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보다 2006년 ‘재특회(在日特權を許さない市民の会)’의 등장이다. ‘재일특권’이라는 명명 자체가 보여주듯, 이 단체는 재일동포가 일본인에게는 없는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바로 이 ‘특권’ 담론이 혐오 동원의 핵심 연료로 작동했다. 그 배경에는 재일동포에게 부여된 ‘특별영주자격’이 있다<sup>1)</sup>. 식민지 지배와 전후 처리라는 고단한 역사적 맥락은 삭제된 채, ‘특별’이라는 표현만이 강조되면서 재일동포가 실질적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재특회가 퍼뜨린 ‘재일특권’ 및 ‘일본인 역차별’ 프레임이다.

한편 지난 20년 동안 헤이트 스피치를 둘러싼 연구와 반혐오 운동 역시 꾸준히 축적되어 왔고, 지자체 차원의 조례를 포함한 법제화도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2014년 이후 경찰청은 재특회를 “극단적인 민족주의·배외주의를 주장하는 위법 단체”로 지목했으며, 2016년에는 오사카에서 혐오 발언 금지를 목적으로 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같은 해 5월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헤이트 스피치의 심각성과 반혐오 투쟁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sup>2)</sup>. 이후 노골적인 혐한 시위는 일정 부분 위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제적 여론은 형태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분출되었고, 혐오발언은 법의 경계에서 더욱 정교하게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의 이민 반대 시위는 ‘헤이트 스피치’라는 낙인을 거부하면서, 과거 혐한 시위의 경험을 보다 대중적인 언어와 방식으로 재조직화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시위 포스터에 적힌 “(우리는) 레이스리스트가 아니다. 여기는 일본이다”라는 문구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현재, 혐오의 지속성과 확장성에 대해 보다 섬세한 검토가

1)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반도 출신자들은 조선적 또는 한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살아왔다. 1965년 한일조약은 한국적 보유자에게만 영주자격 신청을 허용했으나, 1982년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입하면서 조선적 보유자에게도 영주자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1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이들은 ‘특별영주자격’ 지위로 통합되었다.

2) 대표적인 소송으로는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교토조선제1초등학교 앞에서 “조선학교가 공원을 불법점거하고 있다” “간첩 양성 학교” “조선인들을 보건소에서 처분하라” 등 확성기로 폭언을 하고 시위 동영상을 업로드한 재특회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있다. 법원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지극히 악질한 인종차별 행위”로 보고 모욕죄와 위력업무방해죄로 활동가 4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또 학교주변에서 시위활동 금지와 1226만 엔의 배상을 명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나카무라 일성/정미영 번역, 『르포 교토 조선학교 습격사건: 증오범죄에 저항하여』, 도서출판 품, 2018, 참조. 같은 시기에 카운터스로 불리는 반혐오 운동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 일하, 『카운터스: 인종 혐오에 맞서 싸우는 행동주의자의 시원한 한 방!』, 21세기북스, 2016, 그리고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 조경희, 『재일조선인 여성의 교차성과 반혐오의 정동』 『한일민족문제연구』46, 2024.6. 참조.

필요하다. 이 발표에서는 현재 일본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배외주의 정동 정치를 다음의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혐한’에 특화되어 있던 헤이트 스피치의 표적이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주노동자, 유학생, 관광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 신청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환기되면서, 2023년 이후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집주한 재일 쿠르드인을 대상으로 헤이트 스피치가 지속적으로 분출되었고, 코로나 이후 관광객 증가를 계기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 여론 역시 급증했다. 이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저성장, 디플레이션, 엔저 등 장기적·구조적인 경제침체와,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피로와 박탈감 등 중첩된 현실이 있다. 한편에서 일본의 배외주의는 유럽과는 다르게 경제구조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설도 강하게 주장되어 왔다<sup>3)</sup>. 어쨌든 과거의 ‘혐한’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 배외주의 흐름이 새롭게 조직화되고 있다.

둘째, 외국인을 향한 대중들의 피로감이 과거처럼 재특회와 같은 일부 극단적 민간단체가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자극되고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대부터 일본유신회와 같은 극우정당이 등장하긴 했지만, 2025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운 참정당의 약진은 일본사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인을 위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내세운 정당의 등장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고 환영하는 분위기 또한 형성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되, 외국인의 범죄 행위와 제도의 부적절한 적용에는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제시하며, 관광·부동산·의료·비자·귀화 요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 규제 강화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셋째, 위의 점과 관련해서, 이러한 새로운 배외주의 정동이 여성들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바 같이, 다카이치는 헌법 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외국인 지방참정권 반대, 부부별성제 및 동성혼 반대 등 전통적 국가주의 의제를 일관되게 옹호해온 인물이다. 여성 지도자의 등장이 곧바로 젠더 평등이나 소수자 친화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도 이 흐름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대표성의 확대와 배외주의 정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정동적 연결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헤이트 스피치의 확장성과 대중화된 극우 정치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배외주의가 조직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지만,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압승을 우경화로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맥락을 생략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는 최근 일본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배외주의 현상을 보다 섬세하게 맥락화하고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헤이트 스피치 규제 이후 배외주의

최근의 움직임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내용을 통해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규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배외주의 개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행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그 ‘차별적 언행’의 범위를 “차별적 의식을 조장, 유발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알리거나, 외국출신자를 현저히 모멸하는 등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국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sup>4)</sup>. 짧게 정리해보면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란 협박·모멸·배제 행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해당되는가.

3) 樋口直人, 『日本型排外主義—在特会·外国人参政権·東アジア地政学』,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

4) 정칙명칭은 「본방외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https://laws.e-gov.go.jp/law/428AC0100000068>

일본 법무성은 '전형적인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하는 발언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나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sup>5)</sup>. 우선 **협박적** 발언으로는 “○○인을 죽여라”, “바다에 던져버려라”와 같이 특정 집단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표현을 예로 들고 있다. 다음으로 **모멸적** 발언은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바퀴벌레’ 등 곤충·동물·사물에 비유하여 인간성을 부정하는 언행을 포함한다. 설령 이러한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의미를 담은 은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헤이트 스피치로 간주된다. 또한 **배제적** 발언으로는 “○○인은 이 지역에서 나가라” “조국으로 돌아가라” “강제 송환해야 한다”와 같이 특정 집단이 지역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협박·모멸·배제 유형은 많은 경우 서로 결합된다. 예컨대 2013년 재일동포들이 모여 사는 가와사키 사쿠라모토에서의 혐오 시위에서는, 시위 주최자들이 “바퀴벌레 조선인은 꺼져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일본에서 나갈 때까지, 서서히 솜으로 목을 조르듯 조여 죽여주겠다”와 같은 발언을 공공연히 외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sup>6)</sup>. 이 발언은 비인간화에 기반한 모멸, 물리적 위협으로서의 협박, 집단적 추방을 요구하는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 전개된 헤이트 스피치의 전형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배제 유형의 혐오 발언이다. 재일동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온 역사적 경험을 감안할 때, 배제형 혐오 발언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의식화되지 않는 형태의 혐오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협박형이나 모멸형 발언에 비해 일상적 언어로 위장되기 쉽고, 그만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웠다. 그동안 명확히 문제시되지 않았던 배제형 혐오에 대해서도 해소법 제정 이후에는 규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 차원의 반차별 정책으로도 구체화되었다. 예컨대 가와사키시의 ‘반차별 조례’ 제정(2019)을 주도한 최강이자씨는 익명의 블로거에게 “일본에 해를 끼치는 적국인 새끼,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헤이트 스피치를 당한 후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194만 엔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sup>7)</sup>.

이러한 배제형 혐오 발언은 해소법 제정 이후에야 비로소 규제의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 일본사회의 정치적 언어와 정책 담론을 살펴보면 배제의 논리 자체가 약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돌아가라”거나 “쫓아내자”는 노골적인 표현은 자취를 감추었을지라도, “일본인 퍼스트”나 “이민 반대”와 같은 구호는 동일한 배제의 효과를 보다 제도적이고 정당화된 언어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해 애초에 이 사회에 들어올 자격과 머물 권리를 선별함으로써 배제를 정당화하는 배외주의 실천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배외주의는 헤이트 스피치로 연결될 수는 있으나 그와 동일한 층위의 현상은 아니며, 훨씬 더 광범위한 정치적, 제도적 담론이자 정동의 장이다.

일본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는 배외주의(排外主義)는 영어로 완전히 대응되는 개념은 없지만 exclusionism, xenophobia, nativism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exclusionism이 특정 집단을 제도나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원칙이나 정책을 가리킨다면, xenophobia는 외부 집단에 대한 두려움을 기제로 작동하는 정서, 정동을 의미한다. 외국인을 자신들의 안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고, 이에

5) <https://www.moj.go.jp/content/001405173.pdf> 해소법은 또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홍보, 계몽활동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해소법 시행 이후 “Stop! Hate Speech” 캠페인과 같은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고, 경찰은 혐오 시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시위 신청자와 사전 면담을 실시해, 해소법의 취지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폭력이나 명예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자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금지조항이 없는 이념적 법률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한편, 공적 공간에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세운 것만으로도 일정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에 관한 구체적 평가는 본 발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후 다른 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6) “ゴキブリ朝鮮人は出ていけ” “一人残らず日本から出て行くまで、じわじわと真綿で首を絞めてやる”。後藤由耶(毎日新聞記者), 「川崎市・相模原市・三重県の反差別条例その取り組みや効果、課題について」(2022.6.28, 발표자료), 東京弁護士会.

7) 石橋学, 「在日コリアン崔江以子さんへのヘイトスピーチ訴訟で判決 『祖国へ帰れ』は違法」, 『週刊金曜日』2023.10.20.

대한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혐오가 xenophobia라면, 정동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에 의해 점유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틀이 nativism이다. nativism은 한국어로 ‘토착주의’나 ‘자문화보호주의’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맥락과는 구분된다. ‘국민우선주의’라는 표현이 비교적 근접하지만, 역시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이티브리즘이라는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네이티브리즘은 19세기 후반 미국 영토의 유한성에 직면한 앵글로색슨 개신교 집단이 자신들과 문화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신규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움직임으로 등장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멕시코 및 중남미 출신의 미등록 이민자들이 주요 표적으로 부상했으며, 21세기 들어 9.11을 계기로 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안전보장화되면서, 이민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재현하기 시작했다<sup>8)</sup>. 최근 미국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싸고 발생한 ICE의 과잉진압과 학살은 네이티브리즘이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특회 연구로 알려진 히구치 나오토는 배외주의를 네이티브리즘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배외주의란 “국가는 국민만의 것이며, 외국 출신으로 간주되는 집단은 국민국가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데올로기”이다<sup>9)</sup>. 이 발표에서도 히구치의 정의에 따라 배외주의를 네이티브리즘과 가까운 뜻으로 쓰지만, 제노포비아의 정동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즉 배외주의는 네이티브 집단(=주류 국민)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리를 뜻하는 네이티브리즘과, 외국인에 대한 위협감이나 공포증을 뜻하는 제노포비아를 포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상이자 운동이다.

한편 배외주의는 인종주의와 병렬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에서도 초기 혐한류 콘텐츠에서 한반도 출신자들의 외형적 특징이나 민족성을 문화인종주의적으로 형상화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실천들은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를 보면, 극우 정당들이 극단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이른바 ‘정상화(normalisation)’ 전략을 취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예컨대 프랑스 국민전선(FN)의 마린 르 펜은 2018년 당명을 국민연합(RN)으로 변경하고, 부친 장마리 르 펜 시절의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이른바 ‘탈악마화(dédiabolisation)’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극우 세력이 자신들을 둘러싼 배외주의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 표현과 수사를 온건한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것은 노골적인 인종차별 담론이 아니라, ‘상식’, ‘질서’, ‘애국’, ‘국민적 가치’와 같은 보편적이고 무해해 보이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언어는 극단주의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동시에 배제의 논리를 일상적 감각과 결합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사토 시게키는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강화된 무슬림에 대한 배외주의를 분석하면서, 이를 인종주의나 지위 하강에 대한 불안과 같은 비합리적인 감정만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배외주의 담론은 과거의 “독일에서 나가라”와 같은 직접적인 추방 요구에서 벗어나, “독일 사회의 민주적 규칙”을 지키지 않는 무슬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sup>11)</sup>.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무슬림이나 난민이 이미 독일사회에 정착하고 있다는 현실, 재분배를 둘러싼 주류시민들의 불공정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정상화’ 과정은 혐오 발언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면서 나타난 담론적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의 사례는 일본에서 해소법 이후 혐오발언이 일정하게 감소한 이후에도 배제의 정동이 지속적으로 담론화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준다.

이처럼 배외주의는 네이티브리즘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노골적인 헤이트 스피치 감소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 오늘날의 배외주의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거친 이후의 ‘정상화된’ 담론 공

8) 南川文理, 『『移民の国』のネイティヴィズム: アメリカ排外主義と国境管理』, 樽本英樹編著, 『排外主義の国際比較: 先進諸国における外国人移民の実態』, ミネルヴァ書房, 2018.

9) 樋口, 앞의 책, 5쪽; 「排外主義勢力といかに対峙すべきか—極右への対応をめぐるレビュー—」『ユリアン・スタディーズ』3, 2015, 13쪽.

10) 森野咲, 「われわれは極右をどう定義するべきなのか?」, 〈集英社新書プラス〉2025.10.24. 「극우의 마법은 없다... 세력 넓히는 건 기존 정당 실패 탓」: 신진욱-토마스 그룹케 교수 ‘세계적 극우 부상’ 대담 『한겨레』2025.10.20.

11) 佐藤成基, 「なぜ『イスラム化』に反対するのか: ドイツにおける排外主義の論理と心理」, 樽本英樹編著, 앞의 책.

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특정 집단의 인종적 열등성을 주장하는 인종주의라기보다는, 국민과 비국민,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 설정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배외주의의 정치라 할 수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서 외국인(특히 이주민)에 대한 반대 여론은 생물학적 인종 개념보다는 국적, 시민권, 출신지, 체류 자격과 같은 제도적 구분과 외부성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적과 소속을 기준으로 질서를 구획하는 것이 안전하고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그 경계를 넘어 몫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간주하는 오래된 감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외주의는 혐오나 적대의 언어로 직접 표현되기보다는, ‘상식’, ‘책임’, ‘규칙’, ‘공공성’ 등의 언어로 번역되며 헤이트 스피치 규제 이후에도 배외주의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 3. 배외주의의 ‘정상화’ 정치

#### 3-1 ‘이민’ 없는 외국인 정책

일본사회에서 배외주의 움직임은 항상 형태를 달리하며 갱신되어 왔지만, ‘외국인 정책’이 지금까지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의 정책적 배경에는 외국인을 둘러싼 정부의 애매한 입장과 그로 인한 혼선과 무책임의 구조가 존재한다. 2025년 6월 현재 일본의 재류외국인은 395만 6,619명으로 총인구 3.2%를 차지한다<sup>12)</sup>. OECD국가 중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전년도 대비 18만 7,642명이 증가해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중 77.2%는 장기체류나 정주가 가능한 외국인이며, 외국인 비율 10%를 넘는 기초 자치단체도 20곳에 달한다<sup>13)</sup>. 실질적으로 일본은 이미 이민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민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즉, 단순노동자 수용과 그들의 정주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해온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외국인 연수생제도가나 기능실습생제도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3D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저임금 노동력 공급체제로 기능해왔다. 단기 체류라는 전제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붕괴되고 있었지만,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지위 때문에 노동관계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비인권적인 처우가 지속되었다. 2기 아베정부 시기인 2018년에는 산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조선 등 14개 업종에서 단순노동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특정기능 2호’ 재류자격이 신설되어 재류기간 제한 없이 가족을 포함한 이주가 가능해졌다. 사실상의 단순노동자 문호개방이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이 아니다”라는 명분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중장기적으로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경제적 국익에 부합하는 ‘외국 인재’로 규정하는 기본 시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sup>14)</sup>. 결과적으로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외국인과 복지비용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고 간주되는 외국인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통제와 배제를 통해 ‘다문화공생’을 유지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지속해 왔다.

이처럼 일본의 외국인 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면서도, 그들을 장기적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 구조를 유지해왔다. 외국인의 존재는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 일상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용체제와 사회적 이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의

12) 「令和7年6月末現在における在留外国人数について」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13\\_00057.html](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press/13_00057.html)

13) 「転換期における外国人政策のあり方：秩序ある戦略的誘致・受入れ環境整備に向けて」(2025.12.15), 日本経済団体連合会.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86\\_honbun.html#ref4](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86_honbun.html#ref4)

14)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8」을 보면 “이민정책과는 별도로” “외국인재 수용을 확대하기 위해”가 제기되었고, “불법·위장 체류자와 난민인정제도 남용·오용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다문화공생”의 일환으로 강조되었다. 26-28쪽.

식이 부재한 조건 속에서는, 허위정보나 과장된 사건 보도가 쉽게 트리거로 작동하여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 피해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주기적으로 SNS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이 생활보호 제도를 남용한다” “불법체류자가 범죄율을 올린다”는 허위정보 확산은 가장 상투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이러한 네이티브리즘적 정서를 자극하는 담론이 단순한 온라인 가짜뉴스에 그치지 않고, 정치인들에 의해 언급되면서 선거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 3-2 참정당의 ‘유기체적 네이티브리즘’

2025년 참의원 선거는 이러한 불확실한 외국인 정책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당이 내놓은 배외주의적인 외국인 정책은 일본사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줬다. 자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제를, 공명당은 “불법체류자 제로” 공약을 내세우는 등 경쟁하듯이 외국인 규제 강화를 강조했다. 선거운동에서 이 흐름을 견인한 것은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건 참정당이였다. 당수 기미야는 “여기는 일본이니 일본 국민이 풍요로워지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정책을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호소하며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참정당 정책집에는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급 정지, 공무원 채용 제한, 외국인 정책을 일원화하는 ‘외국인종합정책청’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sup>15)</sup>.

참정당의 정책집의 내용은 “일본인 퍼스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일본을 파괴하지 말라!”와 같은 불안과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책 내용으로는 “위기적 상황에 있는 일본을 지키기 위한” 3개의 기둥(“일본인을 풍요롭게 한다”, “일본인을 지킨다”, “일본인을 키운다”)과 9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책 내용은 1. 감세, 2. 일본 재생, 3. 과도한 외국인 수용 반대, 4. 쌀 확보, 5. 의료비 삭감, 6. 팬데믹 조약 반대, 7. 관리교육 폐지, 8. 교육지원금 월 10만엔, 9. 헌법만들기로 구성된다.

관리형 외국인 정책,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전통적인 가족관 수호, 선택적 부부별성제·동성혼 반대 등 참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전통적 보수 우파의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특징적인 점은 이들이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천황을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국민이 아닌 국가에 주권이 있음을 명시한 점이고, 교육칙어와 같은 과거의 유산을 재소환한 점이다. ‘국민의 요건’에는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이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며, 일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정신적 요소를 포함시켰다. 또한 ‘식량 생활’ 조항에서는 쌀 중심의 완전 자급 자족과 종자·비료를 포함한 토착 식재료 중심의 급식 체계를 강조했다<sup>16)</sup>.

이러한 내용은 국가를 단순한 법적·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본래의 혈통공동체와 땅,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의 불가분성을 표현한 유기체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국가관은 외부를 위협으로 위치시키는 네이티브리즘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피와 땅’이라는 구호와 함께 나치가 유기농업에 힘을 썼던 것을 떠올린다면, 이 순결주의 국가관은 인종적인 우생사상과도 연결될 위험이 있다. 일부에서 그들을 ‘오가닉 우파’라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20년 창당 초기부터 참정당이 반백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2022년경까지 참정당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특정 세력의 음모에 의해 강요된 조치로 규정하며 문제 삼았고, 현재도 가미야 대표는 온라인 공간에서 ‘딤스테이트(심층국가)’에 관한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참정당은 트럼프 열성 지지자로 알려진(강연 중 피살된) 찰리 커크, 프랑스 국민연합(RN),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반글로벌리즘과 자국제일주의를 자민당과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정당이 스스로를 단순한 국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글로벌 극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위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은 극우나 배외주의로 평가되는 것을 ‘낙인’이라며 거부하고, 대신 밝고 희망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아름다운 일본’, ‘풍요로운 일본’의 회복을 강조한다. 극단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도 네이

15) 『朝日新聞』2025.7.8.

16) 「参政党が創る新日本憲法(構想案)」 [https://sanseito.jp/new\\_japanese\\_constitution/](https://sanseito.jp/new_japanese_constitution/)

티비즘의 핵심을 유지하는 수법은 유럽 극우의 ‘정상화’ 전략을 모방한 것으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극우 정치의 정형화된 수사와 전략을 재연하는 것에 가깝다.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 담론의 배경에는 유기농, 반백신, 반글로벌 지향이 놓여 있다. 이는 일본이라는 이상적 유토피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순수주의적인 상상력과 연결된다. 유해한 것을 제거하려는 사고방식이 개인의 신체, 식생활, 국가의 경계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관통하고 있다. 신체가 외부 물질(백신)을 거부하고, 유기농 담론이 화학물질을 배제하듯, 국가는 외부자를 배제한다. 이들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상이한 영역에 속해 있지만, 순수와 오염이라는 혐오의 핵심 원리를 공유한다. 이들의 ‘유기체적 네이티브즘’은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지우고, 갈등 속에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상상력과 맞닿아있다.

2026년 중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은 기존 2석에서 15석으로 의석을 늘렸다. 전후 최다인 311석을 확보한 자민당의 압승에 가려졌지만, 참정당의 약진은 일본 사회에서 배외주의적 담론이 주변부를 넘어 제도 정치의 공간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읽을 수 있다.

### 3-3 배외주의의 정책화

참의원 선거에 이어 2025년 10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외국인 정책은 핵심적인 쟁점을 형성했다. 유력한 후보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는 외국인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민당은 국민의 불안과 마주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유세 연설 중에 “나라 공원의 사슴을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일부러 해치려 한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았으나, 이와 같은 배외주의로 연결되는 발언도 일부 정치인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토를 지키고자 하는” 자세로 지지를 얻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은 이미 이시바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 이시바는 강제송환 방침 강화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을 시작해 2025년 7월 내각관방에 외국인 정책 전담 부서(정식명칭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추진실’)를 신설했다. 같은 해 10월에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자, 타카이치는 외국인 정책의 엄격화를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외국인 정책 담당 장관으로 오노다 기미를 임명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자, 강경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오노다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일부 외국인의 범죄 및 민폐 행위, 제도의 부적절한 이용으로 인해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와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아사히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외국인 정책 강화에 대해 66%가 기대, 24%가 염려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sup>17)</sup>.

다카이치-오노다 체제하에서 외국인 문제에 대한 온도는 급속히 높아졌다. ‘외국인재 수용 및 공생에 관한 관계각료회의’ 명칭은 ‘외국인 수용 및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로 변경되어, 출입국과 재류관리(비자·귀화·영주 요건), 경제활동(부동산 취득), 복지(보험료, 의료비 미납), 노동, 교육 등 전반에 있어서 “질서 있는” 대책 강화 방침이 단계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다카이치 정부 발족후 외국인 정책 움직임

날짜	내용
2025.11.04	첫 각료회의 개최: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칙 및 각종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 1월까지 방향성 제시
2025.11.26	1만 엔 이상 의료비 미납 정보 공유 검토. 미납정보를 입국심사·재류심사에서도 활용.
2025.11.27	정부, 외국인 문제 유식자 회의 가동

17) 『朝日新聞』2025.11.16.

2025.12.12	해외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거주용도 신고 의무화 추진
2025.12.15	경단련, 외국인 정책을 '전략적 유치'로 전환 및 기본법 제정 제안
2025.12.16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실태 파악 강화 방침
2025.12.22	외국인 일본 국적 취득 요건 엄격화 방침: 거주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영주 허가에 일본어 능력 포함, 재류자격별 상한수 설정
2025.12.23	'육성취로' 제도 신설: 기존 '특정기능' 자격과 함께 123만 명 외국인노동자 수용 상한 안 제시
2025.12.24	자민당, 외국인 정책을 "국가적 과제"로 규정 정부 제안을 위한 중간 정리
2025.12.26	비자 발급 수수료, 내년도 5배 인상 방침 발표
2026.01.14	유식자 회의, 외국인 학습 프로그램 창설 등 정부에 제안 정리
2026.01.24	외국인 정책 종합적 대응책 발표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약 3개월간의 정책 동향을 정리한 외국인 정책 종합보고서가 1월 24일 발표되었다<sup>18)</sup>.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는 추후로 미루더라도, 그 전반적인 방향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이 수용과 통합을 위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지만,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은 정부의 방침에서 늘 답습되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부의 외국인 정책의 기본틀에서 '다문화'라는 워딩은 삭제되면서, '다문화공생'은 '질서 있는 공생'으로 전환되었다.

다카이치가 강조해온 외국인 정책의 "질서 있는" "적정화" 기조는 제2기 아베 정부가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재류자격 완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책을 수정, 관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아베 정부가 사용해 온 '외국 인재(人材)'라는 표현 대신 '외국인'이라는 용어로 전환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외국인을 경제적 자원으로 호명하던 이전의 어법과 거리를 두는 것이지만, 동시에 외국인을 보다 일반적이고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재범주화하고 있다. 외국인은 더 이상 필요한 인재가 아닌, 원래대로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카이치는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는다"고 밝혔지만, 정책의 방향은 관리·통제·선별·분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은 더 이상 국내 행정 차원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가 안보 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다카이치는 오랫동안 안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정치인으로, '스파이 방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최근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정책과 안보 정책이 병치되는 이러한 흐름은 국민 공동체의 경계를 강화하고 외부자를 관리 대상으로 재배치하는 배외주의의 정책적 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のための総合的対応策」(2026.1.23.), 外国人の受入れ・秩序ある共生社会実現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

#### 4. 배외주의의 젠더화와 페모내셔널리즘

##### 4-1 과잉동일화와 기호화 사이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우파에 속하는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른 것은 자민당에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대처를 롤모델로 삼아온 그의 강한 리더십 이미지는 참정당으로 이탈한 극우 성향 유권자나 부동산층에게 일정 부분 어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은 고령화된 자민당에 신선함과 활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의 젠더 격차가 통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성·외국인·소수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거의 없었다. 다카이치는 헌법 개정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적극 지지해왔으며, 외국인 지방참정권, 선택적 부부별성제·동성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2009년 민주당이 추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에 대해 가장 선명한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공세를 펼쳤고, 2011년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포함하는 방안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배외주의는 일시적 전략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신념의 일부였다. 외국인 정책만이 아니다. 과거 생활보호 제도와 관련해 “약자인 척을 하며 조금이라도 이득을 얻으려는 국민이 늘어나면 일본은 멸망한다”는 발언은,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한 그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부 여성 또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유리천장을 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다카이치가 여성 건강, 돌봄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아동포르노금지법’ 개정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사는 평가도 있다. 남성 정치인들에게 성차별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그를 동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젠더, 외국인, 소수자 이슈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해야한다는 압박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젠더 본질주의에 가깝다. 1기 내각에서 여성 각료는 본인을 제외하면 두 명에 불과했다. 그의 총리 취임은 상징적 의미만큼이나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낳았다.

그러나 여성임에도 극우 정치의 전면에 섰다는 비난도 역시 설득적이지 않다. 세습 정치가 구조화된 일본의 정치 환경에서, 지역 기반의 후원 네트워크가 없었던 다카이치가 어떻게 보수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아베 신조와의 정치적 관계가 있으며, 아베 노선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안보와 헌법개정 문제에서 누구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야 하는 정치적 조건이 있었다.

여성 정치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22개 민주주의 국가의 국방비와 분쟁 행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입법부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국방 지출과 분쟁 행위는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여성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나 주요 각료에 취임할 경우에는 남성보다 국방 지출과 분쟁 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이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여성이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우에노 치즈코는 이러한 현상을 ‘과잉 동일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는 자민당 여성 정치인들 가운데 방위대신을 지낸 인물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면서, 여성 정치인이 약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해 남성 정치인 이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패턴을 읽어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에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민당이 여성 총재를 내세운 것은 집권 여당이 소수 여당으로 전략했기 때문 아닌가. 위기감이 전례 없는 선택지를 택하게 만든다. 기세가 꺾인 조직이 여성에게 막을 내리게 하는 장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이다. 여성 총재는 자민당의 ‘끝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말로 ‘끝이 난’ 순간, 그들은 다시 ‘여자 탕’을 하게 될 것이다”<sup>20)</sup>. 이처럼 여성 지도자의 등장은 곧바로 젠더, 평화, 소수자 친화

19) Koch, M. T., & Fulton, S. A., “In the defense of women: Gender, office holding,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in established democracies”, *The Journal of Politics* 73 (1), 2011, 1-16.

「「女性政治家」「女性候補者」が増えることの社会的影響に関する調査報告」(2022.7.18.) 社会調査支援機構チキラボ.  
<https://www.sra-chiki-lab.com/notification/375/>

20) 上野千鶴子 「フェミニストが高市首相を歓迎できないこれだけの理由」 『世界』 2026.1.

적 정치로 이어지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는 여성이라는 위치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하게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장치로 작동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 중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 압승과 다카이치의 높은 인기는 이러한 분석을 공허하게 만든다. 다카이치는 ‘여성 최초 총리’라는 상징 자본을 유권자들의 감정적 호응을 끌어내는 데 적극 활용했다. 그의 인기를 떠받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성과라기보다 기호화된 이미지와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 그가 품기는 ‘느낌’에 가깝다. “뭔가 일본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 같다”, “예전에는 극우라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총리 취임 이후 미소가 많아져서 좋아하게 되었다”<sup>21)</sup>는 20대 유권자들의 평가는 정치가 ‘덕질’의 대상이 되어가는 동시대 정동의 지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 4-2 페모내셔널리즘

참정당의 사례를 다시 들여다보면, 여성들의 젠더화된 수행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참정당은 다수의 여성 후보자를 내세워 ‘친여성 정당’의 이미지를 연출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낙태 반대, 선택적 부부별성 반대 등 강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당수 가미야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남녀공동참획’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여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출산을 장려한다. 여성의 신체는 모성과 국가를 매개하는 상징으로 동원되고, 가족주의적 가치가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자리매김된다.

예컨대 참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정당 후보 ‘사야’가 “저를 여러분의 어머니로 삼아 달라”고 외친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이들과 같은 애칭으로 출마한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자신을 ‘어머니’로 호명해 달라는 요청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정치적 대표성을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모성과 가족적 친밀성의 언어로 매개하는 전략은, 여성성을 통해 배외주의를 부드럽게 포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라 파리스(Sara Farris)가 제시한 페모내셔널리즘(femonationalism)을 참조할 수 있다. 파리스는 서구 국가들에서 여성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반이슬람적이고 배외주의적 담론이 확산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국가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공모적으로 여성의 인권, 자유, 안전을 내세워 타자 배제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지적했다<sup>22)</sup>. 페미니즘의 언어가 국가주의나 배외주의 정치에 포섭되는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2018년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여성의 안전’을 이유로 여성들 중에서도 광범위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이는 여성의 주체성을 호명하는 듯 보이지만, 여성의 위치를 국가와 가족, 모성이라는 틀 속에 흡수한다. ‘여성의 안전’이라는 담론은 곧 ‘아이들의 안전’, ‘가정의 안전’, ‘생활의 안전’으로 확장되며, 배외주의적 정동은 보다 일상적인 영역으로 침투하게 된다. 정치적 경계 담론이 생활윤리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배제의 감각은 훨씬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된다. 참정당이 식량 문제를 선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식량 위기와 농업 쇠퇴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기농 식재료로 아이들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활 차원의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적 생활과 돌봄을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sup>23)</sup>.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는 국가 전략임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의 문제로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참정당은 좌우 이념을 넘어 지역생활의 윤리와 안전을 배려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참정당의 이러한 친환경주의에 대해서는 유기농업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도 제기되었다. ‘국제유기농업영화제’는 “배외주의로 감싼 유기농은 먹으면 위험하다”고 항의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농민·소비자·생활자들 또한 “농업과 식량이 국가주의와 배외주의의 틀 속에서 거론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sup>24)</sup>. 이들은 나치 독일과 전전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기농업과 배외주의가 결합하는 위

21) 『東京新聞』2026.2.1 <https://www.tokyo-np.co.jp/article/465802>

22) Sara R. Farris, *In the Name of Women's Rights: The Rise of Femonation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17.

23) 『東京新聞』2025.8.8. <https://www.tokyo-np.co.jp/article/427076>

24) 「[声明]有機農業の精神に反する参政党へ」, 国際有機農業映画祭 <http://www.yuki-eiga.com/5996>

大野和興, 「国家主義、排外主義をオーガニックでくるむ参政党に異議あり 有機農業に関わる農民・市民団体が声明」

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했다. 또한 참정당이 “발달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데 대해 자폐증협회가 항의문을 발표하는 등, 먹거리·교육·의료 영역에서 배외주의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대항적 정동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과 돌봄의 언어가 배제의 정치로 수렴되는 흐름에 맞서, 다른 방식의 공생과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

이상 본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 관찰되는 극우의 부상, 네이티브즘과 순수주의, 그리고 여성·안전 담론이 결합한 새로운 배외주의의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배제는 더 이상 노골적인 혐오 발언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생활의 안전’, ‘아이들의 미래’,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일상적 언어 속에 스며든다. 바로 그 점에서 현재의 배외주의는 더욱 비가시적이고 ‘정상화’된 형태로 작동한다. 2025년 일본 사회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그러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안전 담론과 젠더가 어떻게 동원되고 재배치되는지를 향후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yahoo News』2025.7.15.